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관점에서 본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 의향*

: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예정 군인을 중심으로

Veterans' Regional Settlement Intentions from a Local Population Policy Perspective

: Focusing on Pre-Discharge Military Personnel i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정 기 용**·주 희 진***

Kiyong Jeong·Heejin Ju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및 정책적 배경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본 연구는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제대군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정착대상으로 검토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예정 군인의 전역 이전 단계에서 형성되는 사전적 지역 정착 의향과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역예정 군인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대(예정)군인·공무원·상당사 13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착 의향은 높았으나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은 가장 낮아 정착 의향과 실현 조건 간의 괴리가 확인되었다. 상관 분석에서는 모든 요인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위계적 회귀분석의 최종모형에서는 가족의 지지와 통제변수인 강원 근무경험이 유의하였다. 복수응답과 인터뷰에서도 가족의 의견은 정착 선택의 주요 기반으로, 군 경력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부족은 핵심 제약으로 나타났다. 이

* 본 연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이슈리포트인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대군인 정착지원 고도화 방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제1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2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논문 접수일: 2026. 7. 22. 심사기간: 2026. 7. 22. ~ 2026. 9. 2. 게재확정일: 2026. 9. 2.

에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개인의 전직지원을 넘어 군 경력과 지역 일자리의 연계, 가족 단위 생활 기반 지원, 전역 이전 정책대상 발굴을 포함하는 장소기반적 인구정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제대군인, 지역 정착 의향, 인구정책, 강원특별자치도

This study examines veterans as a strategic target group for local population policy and analyzes factors associated with settlement intentions among military personnel approaching discharge i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study draws on a survey of 65 participants in a pre-discharge preparation program and supplementary interviews with 13 participants, including prospective veterans, public officials, and counselor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sess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ettlement intention and five factors at the individual, regional, policy, and family levels. Among the same respondents, settlement intention was high while perceptions of local employment opportunities were the lowest, revealing a gap between willingness to settle and the conditions required to realize it. Although all five factor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ettlement intention, only family support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together with prior service experience in Gangwon as a control variable, remained significant in the final regression model. Multiple-response items and interviews also showed that family considerations were central to settlement decisions, whereas the lack of suitable jobs was the main constrai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ocal veteran settlement policy should develop into a place-based population policy linking military experience with local employment, supporting family living conditions, and identifying potential settlers before discharge.

□ Keywords: Military Veterans, Regional Settlement Intention, Population Policy,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 서론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인구의 유입을 위해 경쟁하고 있지만,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오는가보다 그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총인구가 자연감소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8%가 거주할 만큼 인구의 공간적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통계청, 2025). 정부는 2021년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2025년 한 해에도 비수도권에서 20대 약 4만 8천 명이 순유출되어 대부분 수도권으로 이동하였다(국가데이터처, 2026). 이에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의 과제는 전 입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유입된 인구가 지역에서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주거, 귀농·귀촌 및 정착지원금 등 다양한 인구유입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유사한 정책수단으로 동일한 인구집단의 유치를 놓고 경쟁하는 구조에서는 한 지역의 유입이 다른 지역의 유출로 이어지는 제로섬적 성격을 피하기 어렵고, 유입정책의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와 정주여건에 의존하는 만큼 그 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지역일수록 실효성이 제약된다. 따라서 인구정책은 지역과 이미 관계를 형성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발굴하고 그 정착을 제약하는 조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제대군인에 주목한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장기간의 군 복무를 통해 근무지역에서 생활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축적하고 전역 이후에도 상당 기간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매년 일정 규모의 전역자가 발생하고 가족 단위 정착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회적인 유입대상과 구별된다. 2025년 말 기준 전국의 등록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약 12만 9천 명이며, 강원특별자치도에는 9,309명이 거주한다. 강원지역 제대군인은 2021년 6,971명에서 매년 약 500~600명씩 증가하고 있다¹⁾.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과 군 부대가 다수 분포하여 직업군인과 가족이 지역과 접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2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체 조례와 예산에 근거한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지역 내 인구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제대군인 정착지원을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현행 제도에 내재된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1) 출처: 국가보훈부(<https://www.mpva.go.kr>). 보훈대상자 기본 현황.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실천에 비해 학술논의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는 중앙정부의 전직지원제도와 취업성가에 초점을 두어 제대군인이 어느 지역에 정착하는가라는 공간적 차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룬 연구가 제한적이며, 대부분 전역 이후를 사후적으로 분석하여 전역 이전의 정착 의향을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다. 가족관계의 중요성도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가족의 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른 요인과의 상대적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제대군인을 지역과 일정한 접점을 형성한 잠재적 정착인구로 보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사례로 전역예정 군인의 강원지역 정착 의향과 관련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제대(예정)군인과 정착지원 관계자가 인식하는 정착 제약조건과 정책수요를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착 의향을 실제 정착과 지역 내 경제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직접 분석하지 않으며 실제 정착 여부를 추적한 자료도 활용하지 않으므로, 연구범위는 전역 이전에 형성되는 사전적 정착 의향과 그 관련요인의 분석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역예정 군인의 강원지역 정착 의향은 어떠한 수준이며, 개인·지역·정책·가족 차원의 요인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가? 둘째, 제대(예정)군인과 정착지원 관계자는 강원지역 정착 의향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데 제약이 되는 조건과 필요한 정착지원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를 위해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의 전역 전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역예정 군인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대(예정)군인과 담당 공무원 및 상담사 등 13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설문자료는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복수응답과 심층인터뷰는 양적 분석결과와 맥락을 보완하는 데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강원지역 정착 의향은 매우 높았으나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은 가장 낮아, 정착 의향과 이를 실현할 조건 사이에 뚜렷한 괴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괴리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본 연구의 중심 논제이다. 본 연구는 제대군인을 인구정책의 전략적 대상으로 재해석하고 전역 이전의 사전적 정착 의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착 가능성에 기반한 정책대상 발굴과 장소기반적 정착지원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II. 이론적 및 정책적 배경

1. 장소기반 인구정책과 지역 정착 의향

우리나라의 지역 인구감소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감소와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유출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이다. 최예술(2022)은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의 인구감소에 자연적 증감뿐 아니라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최예술, 2022: 5-6). 비수도권 청년층과 생산가능인구의 유출은 지역의 노동 공급과 소비기반을 약화시켜 다시 일자리 감소와 추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구감소 대응은 출생률 제고에 머무르지 않고 인구이동과 지역 간 정주여건의 격차를 함께 다루는 지역발전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대응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과 지역별 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의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며(제1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추진을 책무로 부여하고 있다(제3조·제6조·제7조).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의 유입·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를 강조한다(관계부처 합동, 2023: 1-4).

다만 인구정책에서는 외부 인구의 유치와 유입 인구의 안정적 정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역 정착은 주소지 이전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확보하고 생활기반을 형성하며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이다. 민보경(2025)은 체류인구의 양적 증가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보장되지 않으며 지역 내 활동의 질과 정주민구로의 전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민보경, 2025: 63). 이는 인구정책이 유입 규모보다 지역 내 정착과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별로 상이한 여건과 자산을 정책설계에 반영하는 장소기반 인구정책의 관점과 연결된다. 장소기반 정책은 전국에 동일한 수단을 적용하기보다 특정 지역의 산업구조, 노동시장, 생활여건 및 제도적 역량을 고려하여 정책수단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접근으로, 인구정책 역시 불특정 다수의 유입보다 지역과의 접점과 경제활동 가능성 등 정책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착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정책적으로는 그 출발점인 지역 정착 의향에 주목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지역 정착 의향은 전역 이후 특정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지역을 긍정적인 정착지로 평가하려는 사전

적 태도를 의미한다.

정착 의향은 실현되지 않은 계획이라는 점에서 실제 정착행동과 구분되지만, 거주지 선택에 앞서 형성되는 심리적 지향이라는 점에서 향후 행동의 선행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계획행동이론은 행동의도를 실제 행동의 가장 근접한 선행요인으로 보면서도, 행동의 실현은 의도 뿐 아니라 이에 필요한 기회와 자원 및 통제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Ajzen, 1991). van Dalen & Henkens(2013)도 네덜란드에서 이주 의향을 밝힌 사람 중 약 34%가 5년 이내에 실제로 이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의 전체 모형을 검증하거나 해외이주 연구의 결과를 국내 정착행동에 직접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 의향과 실제 정착을 구분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이러한 논의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구유입·정착정책은 모든 집단에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기보다 정착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발굴하여 그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박진경·김도형(2020)은 실제 지역이주 가능성이 있는 대상의 연령, 직업, 소득수준과 장소 선호를 파악한 맞춤형 정책과, 개별 사업의 분절적 추진이 아닌 대상집단의 수요와 정착단계를 고려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박진경·김도형, 2020: 328-334). 본 연구는 제대군인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정책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다만 지역과의 접점만으로 정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군 경력과 연계된 일자리, 안정적 소득, 주거와 생활 인프라 및 가족의 생활기반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대군인을 전략적 정책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가 아니라, 정착 가능성이 있는 인구집단이 장기적인 정주인구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장소기반적 인구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음 절에서는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 의향이 개인·지역·정책·가족 요인과 어떠한 논리적 경로를 통해 관련되는지를 검토한다.

2.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 의향 관련 구조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정착 의향은 향후 정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지표이므로, 그 의향이 어떠한 요인과 관련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Lee(1966)는 이주가 출발지와 목적지의 요인, 그 사이의 개입 장애 및 개인적 요인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를 적용하면 정착 의향은 개인의 역량과 자원, 지역의 생활·경제 여건, 정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정책지원 및 거주지 선택의 단위가 되는 가족의 여건과 관련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이론은 단일한 인과이론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을 설명하는 보완적 관점이다. 이하에서는 이론과 제대군인 선행연구를 결합하여 각 요인이 정착 의향과 관련되

는 논리를 개인·지역·정책·가족 차원으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강원지역 군 근무기간이 관련될 수 있는 경로를 살펴본다.

첫째, 개인 차원의 직업전환 준비도이다. 인적자본 관점에서 이주는 이동 비용과 목적지의 기대편익을 비교하는 투자행위이며(Sjaastad, 1962), 개인의 직업역량은 전역 이후 소득과 생활기반을 확보하는 핵심 자원이 된다. 양안나·정철영(2011)과 김상일 외(2015)는 군 경력을 민간 직무역량으로 재해석·활용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김점석·박효선(2016)과 정철영 외(2022)는 군의 전문성과 민간 실무능력 간 격차 및 계급정년에 따른 비자발적 전역이 직업전환을 제약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직업전환 준비도가 정착 기반의 마련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지역 차원의 생활여건 인식이다. 목적지의 흡인 요인은 개인이 해당 지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조건을 의미하며(Lee, 1966), 장기 거주를 전제로 하는 정착에서는 주거, 의료, 교육, 자연환경 등 비경제적 생활여건도 중요한 장소평가 기준이 된다. 김민혁·김수환(2024)과 정철영 외(2022)는 전역 이후 주택 마련, 자녀교육비 및 생활비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여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생활여건이 경제활동 기회와 구분되는 정착 기반을 구성하며,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장기거주 의향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지역 차원의 취업 가능성 인식이다. 이주의 기대수익은 목적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고용과 소득의 기회에 좌우되므로(Sjaastad, 1962), 정착 의향은 그 지역에서 자신의 경력에 부합하는 일자리와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와 관련된다. 이현주(2025)와 양혜원·유근환(2023)은 일정 수준의 소득과 경제활동 참여가 제대군인의 삶의 질과 생활안정에 중요하게 관련된다고 보았다. 특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역 이후에도 경제활동이 필요한 연령대에 분포하므로, 취업 가능성 인식은 정착 의향의 경제적 기반을 구성한다.

넷째, 정책 차원의 정착지원정책 효과 인식이다. 이주 과정에는 정보의 부족, 탐색비용 및 생활기반 전환의 불확실성과 같은 제약이 작용하는데(Lee, 1966; DaVanzo, 1981),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지원정책은 지역 일자리·생활정보 제공, 교육·상담 및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이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전직지원과 구분된다. 정철영 외(2022)와 김민혁·김수환(2024)은 전역 전후를 포괄하는 단계적 지원체계를, 정철영 외(2022)와 남응우(2015)는 취업·교육·주거·가족 지원 간 연계와 기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정책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정착의 불확실성을 낮추어 정착 의향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가족 차원의 지지이다. 가족이주론은 의사결정 단위가 가구 전체임을 강조하며, Mincer(1978)는 특정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이동이라도 배우자의 경력 등 다른 구성원의 손실이 크면 실행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현주(2025), 김민혁·김수환(2024), 정철영 외

(2022)도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질과 사회적응에 긍정적으로 관련되는 반면 배우자의 경력단절과 자녀교육 문제는 생활안정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착지역 선택은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자녀교육을 함께 고려하는 가족 단위의 의사결정이며, 가족의 동의와 지지는 정착 의향의 형성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지역 근무경험은 장소애착과 지역 특정적 자본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장소애착은 개인과 특정 장소 사이의 정서적 유대로서 그 장소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와 생활경험을 포함하며(Hidalgo & Hernández, 2001), DaVanzo(1981)는 주택, 관계망 및 지역 지식과 같이 다른 지역보다 현재 지역에서 더 큰 가치를 갖는 자산을 지역 특정적 자본으로 개념화하였다.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한 군인과 그 가족이 축적한 생활기반과 관계망은 전역 이후에도 해당 지역을 정착지로 고려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다섯 요인은 제3장에서도 가설 1~5로 설정하며, 강원지역 군 근무기간은 새로운 가설이 아니라 통제변수로 반영되 그 결과는 위 관점에서 해석한다.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1) 제대군인의 정책적 특성 및 현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대군인을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복무기간에 따라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와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직업군인으로 장기간 복무한 후 민간 노동시장으로 이행한다는 점에서 의무복무를 마친 일반 전역자와 구별되는 정책적 특성을 갖는다.

제대군인의 전역은 민간부문의 퇴직과 성격이 다르다. 직업군인은 계급별 연령정년으로 인해 민간의 일반적 정년보다 이른 시기에 전역하는 경우가 많으며(「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자녀교육과 주거비용 등 가계지출이 집중되는 중·장년기에 새로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또한 잦은 부대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인해 전역 이후의 거주지역 선택은 개인의 취업 가능성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장, 자녀의 생애단계, 주거·의료·교육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는 가족 단위의 의사결정이 된다.

제대군인은 그 규모와 연령 구성에서도 지역 인구정책의 실질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집단이다. 2025년 12월 말 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전국 129,147명이며, 65세 이상이 3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이는 과거 전역자가 누적된 결과이고 「군인사법」상 계급정년을 고려할 때 매년 사회로 배출되는 신규 제대군인의 주력은 50대(19.9%)이다. 지역적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대군인이 9,309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

하며, 2021년 6,971명에서 매년 약 500~600명씩 등록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경우 인구 유입과 경제활동 기반 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다.

〈표 1〉 전국 및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현황

구분	항목	인원(명)	비율(%)/증감	구분	항목	인원(명)	비율(%)
전국 제대군인	총원	129,147	100.0	연령별 제대군인 현황	29세 미만	6,032	4.7
강원 제대군인 연도별 추이	2021년	6,971	—		30~39세	25,761	20.0
	2022년	7,532	(+561)		40~49세	17,967	13.9
	2023년	8,118	(+586)		50~59세	25,639	19.9
	2024년	8,722	(+604)		60~64세	14,520	11.2
	2025년	9,309	(+587)		65세 이상	39,228	30.4

주1: 국가보훈부 등록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기준

주2: 강원 제대군인은 2025년 기준 전국의 7.2% 차지

주3: 증감의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 인원임.

출처: 국가보훈부(<https://www.mpva.go.kr>), 보훈대상자 기본 현황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국가안보에 대한 기여를 예우하는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군 경력의 민간 활용과 직업전환, 가족생활의 안정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박혜란, 2009; 박효선, 2022). 실제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전국 단위의 보편적 전직·사회복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특정 지역 중심의 정착지원으로 구분된다.

2) 중앙정부 제대군인 지원정책²⁾

중앙정부의 지원체계는 전역 시점을 기준으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근거하여 국방전직교육원을 중심으로 전역예정 간부에게 진로교육, 전직기본교육, 전직컨설팅을 제공하며, 복무기간에 따라 일정한 전직지원기간을 부여한다(국방부, 2025: 60~61). 국가보훈부는 전국의 제대군인지원센터와 온라인 통합정보망을 기반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체계는 전역 이전의 준비부터 전역 이후의 취업과 사회적응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제대군인의 직업전환에 필요한 기본적 기반을 제공한다.

2) 출처: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vnet.go.kr/VnetIndex.do>)

중앙정부 정책의 핵심적 특징은 전국 단위의 보편적 지원이라는 점이다. 정책의 목표는 제대군인이 민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는 데 있으며, 주요 정책수단도 개인의 진로 설정, 직업교육훈련, 구직역량 강화, 취업 알선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제대군인이 어느 지역에서 취업하고 거주할 것인지는 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되지 않으며, 특정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를 연계하거나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기반을 지원하는 기능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개인의 직업전환이 성공하더라도 그 결과가 특정 비수도권 지역의 정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중앙정부의 보편적 전직지원과 구분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착지원이 필요한 근거가 된다.

3) 지방자치단체 제대군인 지원정책: 강원특별자치도 사례³⁾

지방자치단체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특정 지역에서의 거주와 경제활동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장소기반적 성격을 갖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과 군부대가 다수 분포하여 장기간 근무하거나 가족생활 기반을 형성한 제대군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2012년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이 센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체 예산으로 설립·운영되는 제대군인 전담 지원조직이다.⁴⁾

강원 정책의 성격은 조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조례는 센터의 설립 목적을 도내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명시하여(제1조), 제대군인 지원을 보훈이나 전직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원대상 또한 '도내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으로 규정하고(제4조) 2026년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4년 이상 복무자까지 확대하였는데, 이는 5년 이상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 법령보다 넓은 것으로 복무기간보다 지역에 정착할 의사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잠재적 정착인구로 포괄하려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센터는 도 비상기획과 소속으로 취업·창업 지원, 귀농·귀촌·귀산촌 정착지원, 교육·상담 및 채용정보 제공 등을 수행한다(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2026). 다만 현재의 지원은 개인 단위의 교육·상담 기능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도내 일자리와의 실질적 연계, 가족 단위 생활지원 및 정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는 향후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다.

3)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armyjob.kr/gwarmy>)

4) 강원 도내 일부 접경지역 시·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가 있으나, 광역단위에서 전담기관을 두고 정착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제대군인 지원정책 비교

법적 근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주관 기관	국방부·국가보훈부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정책 목표	민간 노동시장 이행과 사회복귀	도내 정착과 지역사회 정착
정책 관점	보편적 전직·사회복귀 지원	지역 인구 유입 및 지역발전
공간 범위	전국 단위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대상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4년 이상 복무하고 도내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예정)군인
지원 초점	개인의 직업전환 역량, 취업·창업	지역 내 일자리, 창업·귀농·귀촌 및 생활기반 연계
기대 성과	취업·창업과 안정적인 사회복귀	도내 경제활동, 가족생활 기반 형성 및 장기 정착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대체관계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보완되는 관계에 있다. 중앙정부의 전직지원이 노동시장 이행에 필요한 보편적 기반을 제공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지원은 그러한 이행이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장기적 거주로 연결되도록 지역의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연계한다. 간명하게 표현하면, 중앙정부 정책이 제대군인이 ‘무엇으로 전직할 것인가’를 다룬다면,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어디에서 일하고 정착할 것인가’를 다룬다. 이러한 구분은 본 연구의 분석관점과 직접 연결되는데, 개인의 직업전환 준비도와 취업역량이 높더라도 적합한 지역 일자리와 생활여건, 가족의 동의와 생활기반이 확보되지 않으면 특정 지역에 대한 정착 의향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전환 준비도뿐만 아니라 지역 생활여건,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정착지원정책 및 가족의 지지를 함께 분석한다.

4.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앞서 제2절에서 검토한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 의향 관련 이론과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 의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구분	이론 및 주요 연구	주요 내용	모형 대응
직업전환 준비와 인적자본	Sjaastad(1962); 양안나·정철영(2011); 김상일 외(2015); 김점석·박효선(2016); 정철영 외(2022)	군 경력의 민간 직무역량 전환과 전역 이후 생활설계를 위한 준비	가설 1

구분	이론 및 주요 연구	주요 내용	모형 대응
지역 생활여건과 장소 평가	Lee(1966); 김민혁·김수환(2024); 정철영 외(2022)	주거·의료·교육·문화 등 비경제적 정주환경에 대한 평가	가설 2
지역 내 취업 가능성과 경제적 기회	Sjaastad(1962); 이현주(2025); 양혜원·유근환(2023)	군 경력 활용 일자리와 안정적 소득 확보 가능성	가설 3
지방자치단체 정착지원정책	Lee(1966); DaVanzo(1981); 정철영 외(2022); 김민혁·김수환(2024); 남응우(2015)	정보·탐색비용과 정착 불확실성 완화, 단계별·기관 간 연계지원	가설 4
가족 단위 이주 의사결정	Mincer(1978); 이현주(2025); 김민혁·김수환(2024); 정철영 외(2022)	배우자 경제활동, 자녀교육 및 가족생활권을 고려한 가구 단위 결정	가설 5
지역 근무경험과 장소애착·지역 특정적 자본	Hidalgo & Hernández(2001); DaVanzo(1981)	장기 근무를 통한 장소애착, 관계망 및 지역 특정적 자본의 축적	통제변수

이상의 선행연구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정착에 직업전환, 경제활동, 생활기반, 가족관계 및 정책지원이 복합적으로 관련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중앙정부의 전직지원제도와 전국 단위의 취업·사회복귀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제대군인이 어느 지역에 정착하는가라는 공간적 차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룬 연구는 제한적이다.

또한 기존 연구는 전역 이후의 취업성과, 사회적응 및 삶의 질을 주로 분석하였으며, 전역을 앞둔 단계에서 형성되는 지역 정착 의향과 그 관련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다. 가족관계의 중요성도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으나, 가족의 지지를 독립적인 변수로 설정하여 다른 요인과 함께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아울러 기존 연구는 직업전환, 생활기반, 가족관계 및 정책지원을 개별 주제로 다루어, 이들 요인이 하나의 정착 의향 관련구조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의사결정, 인적자본, 가족이주, 장소애착 및 지역 특정적 자본에 관한 논의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 의향을 개인·지역·정책·가족 차원의 요인이 결합되는 과정으로 보고, 전역예정 군인을 대상으로 전역 이전에 형성된 사전적 정착 의향과 각 요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소기반적 정착지원정책과 가족의 지지를 함께 검토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가설과 분석모형을 설정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본 연구는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 의향이 개인의 전직 준비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생활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및 가족의 지지와 복합적으로 관련된다고 본다. 이에 제2장의 논의를 토대로 관련요인을 개인 차원인 직업전환 준비도, 지역 차원인 지역 생활여건 인식과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 정책 차원인 지방자치단체 정착 지원정책 효과 인식, 가족 차원인 가족의 지지로 구분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분석하는 지역 정착 의향은 실현된 정착 성과가 아니라 전역 이전에 형성된 사전적 의향이므로, 사후적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보다 정착 의향과 각 요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그 의향이 실제 정착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조건을 탐색한다. 즉 본 연구의 설계는 사전에 설정한 가설을 연역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가설검증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응답과 심층인터뷰 결과를 통합하여 탐색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와 해석에서 제시되는 ‘정착 의향의 형성 기반’과 ‘실현 조건’의 구분은 사전에 설정한 가설모형이 아니라 양적·질적 결과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탐색적 해석임을 밝혀둔다.

1) 연구가설

이상의 분석관점과 제2장의 논의를 토대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는 제대군인의 직업전환을 군 경력을 민간 직무역량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본다(양안나·정철영, 2011; 김상일 외, 2015). 직업전환 준비도가 높을수록 전역 이후의 진로와 생활기반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으므로 정착 의향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1. 직업전환 준비도가 높을수록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 의향은 높을 것이다.

둘째, 지역 정착은 경제활동뿐 아니라 주거·의료·교육 등 정주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선행연구도 주거와 생활기반의 확보를 안정적인 사회정착의 주요 조건으로 제시하였다(김민혁·김수환, 2024; 정철영 외, 2022). 따라서 생활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해당 지역을 장기 거주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2. 지역 생활여건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 의향은 높을 것이다.

셋째, 선행연구는 안정적인 소득과 경제활동 참여가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에 중요하게 관련 된다고 보았다(이현주, 2025; 양혜원·유근환, 2023). 특히 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와 소득의 확보 가능성은 전역 이후의 거주지역을 선택하는 주요 조건이 될 수 있다.

가설 3. 지역 내 취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 의향은 높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지원정책은 중앙정부의 보편적 전직지원과 달리 특정 지역에서 의 취업과 생활기반 형성 및 장기거주를 지원하는 장소기반적 정책이다. 따라서 취업·창업 교육, 상담, 정보 제공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해당 지역에서의 정착을 긍정 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가설 4. 지방자치단체 정착지원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제대군인의 지역 정 착 의향은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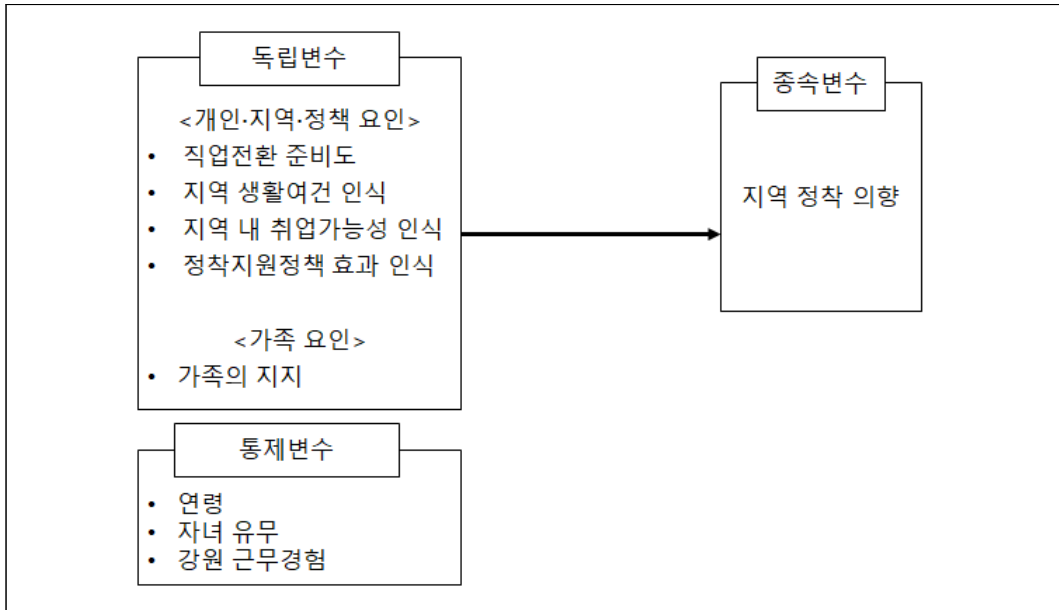
다섯째, 선행연구는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이 개인의 선택에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의 경제활 동, 자녀교육 및 가족생활 기반을 함께 고려하는 가족 단위의 문제임을 지적해 왔다(이현주, 2025; 김민혁·김수환, 2024; 정철영 외, 2022). 이에 가족이 해당 지역의 정착에 동의하고 지역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착 의향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5.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 의향은 높을 것이다.

2) 분석모형

앞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 정착 의향을 종속변수로 하고 직업전환 준비도, 지 역 생활여건 인식,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 지방자치단체 정착지원정책 효과 인식 및 가족 의 지지를 독립변수로, 연령·자녀 유무·강원 근무경험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통제변수와 주요 독립변수의 단계별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모형 1에는 연령, 자녀 유무 및 강원 근무경험 등 통제변수를 투입한다. 모형 2에서는 직업전환 준비도, 지역 생활여건 인식,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 및 지방자치단체 정착 지원정책 효과 인식을 추가하여 개인·지역·정책 차원의 요인이 갖는 설명력을 분석한다. 모형 3에서는 가족의 지지를 추가로 투입하여, 다른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가족의 지지가 지역 정착 의향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지를 검토한다. 각 단계에서는 설명력의 변화(ΔR^2)와 개별 변수의 회귀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다.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 [모형 1] 통제변수 모형: 지역 정착 의향 = $\beta_0 + \beta_1(\text{연령}) + \beta_2(\text{자녀 유무}) + \beta_3(\text{강원 근무 경험}) + \epsilon$
- [모형 2] 개인·지역·정책 요인 모형: 지역 정착 의향 = $\beta_0 + \beta_1(\text{연령}) + \beta_2(\text{자녀 유무}) + \beta_3(\text{강원 근무경험}) + \beta_4(\text{직업전환 준비도}) + \beta_5(\text{지역 생활여건 인식}) + \beta_6(\text{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 + \beta_7(\text{지방자치단체 정착지원정책 효과 인식}) + \epsilon$
- [모형 3] 가족 요인 포함 모형: 지역 정착 의향 = $\beta_0 + \beta_1(\text{연령}) + \beta_2(\text{자녀 유무}) + \beta_3(\text{강원 근무경험}) + \beta_4(\text{직업전환 준비도}) + \beta_5(\text{지역 생활여건 인식}) + \beta_6(\text{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 + \beta_7(\text{지방자치단체 정착지원정책 효과 인식}) + \beta_8(\text{가족의 지지}) + \epsilon$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문항, 통제변수의 구체적인 코딩 방식 및 분석방법은 변수 구성 및 분석방법에서 기술한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을 기본 분석으로 하고, 복수응답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양적 분석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정착 의사결정의 맥락과 조건 인식을 보완적으로 파악하는 양적 우세의 수렴적·보완적 혼합설계를 적용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는 유사한 시기에 병행하여 실시되었으며, 두 자료의 통합은 자료수집이나 분석 단계가 아니라 결과 해석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의 전역 전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역예정 군인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전역 이후의 직업과 거주지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단계에 있어 사전적 정착 의향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다만 센터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착과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정착 의향의 평균 수준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표본이 성별, 연령, 복무기간 및 강원 근무기간에서 동질성이 높아 관련 변수의 분산이 제한되어 통계적 유의성 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역예정 군인 집단에서 관찰된 결과로 해석해야 하며,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심층인터뷰는 제대(예정)군인과 센터 담당 공무원 및 상담사 등 총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은 2~4인 단위의 소규모 집단면담으로 회당 약 1시간씩 진행하였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센터 교육일에 모이는 일정과 접근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방식은 유사한 상황의 참여자가 서로의 경험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발언 간 상호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어, 위계의식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계급은 수집하지 않았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녹음·전사하였으며, 전사자료는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의미단위를 분류하여 가족 의사결정, 지역 생활기반, 일자리 및 정책지원의 네 범주로 재구성하고 공동연구자 간 교차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하였다. 인터뷰 결과는 정착 의향의 형성 맥락과 제약조건을 파악하고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보완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4〉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구분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조사목적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 의향과 개인·지역·정책·가족 요인 간의 관계 분석	정착 의향의 형성 맥락과 실제 정착 전환 과정의 제약조건 보완적 확인
조사대상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전역 전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역예정 군인	제대예정 군인, 센터 담당 공무원, 상담사
조사인원	65명	총 13명(제대예정 군인 7명, 센터 담당 공무원 2명, 상담사 4명)
조사기간	2026년 3월 26일~4월 1일	2026년 3월 17일, 25일, 31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조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2~4인 단위 소규모 집단면담
주요 조사내용	지역 정착 의향, 직업전환 준비도, 지역 생활여건 인식,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 지방자치단체 정착지원정책 효과 인식, 가족의 지지	지역 정착 의향과 결정요인, 정착 저해요인, 정책수요, 정착지원센터 운영 경험

3. 변수 구성 및 분석방법

1) 변수 구성

종속변수는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 의향으로, 전역 이후 특정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지역을 긍정적인 정착지로 평가하는 사전적 태도를 의미하며, 강원 특별자치도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 차원의 직업전환 준비도, 지역 차원의 지역 생활여건 인식과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 정책 차원의 정착지원정책 효과 인식, 가족 차원의 가족의 지지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각 전역 이후 민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기 위해 준비된 정도, 해당 지역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해당 지역에서 군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전직 준비와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정도, 가족이 해당 지역으로의 정착에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변수 구성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변수의 구성 및 측정

구분	변수	측정문항	문항 수	Cronbach's α
종속 변수	지역 정착 의향	강원 장기 거주 의향, 강원 취업·창업 우선 고려, 강원 정착 추천 의향	3	.715
독립 변수	직업전환 준비도	군 경험·역량의 민간 활용, 민간 직업환경 적응 준비, 진로계획 명확성, 자격·교육훈련 준비	4	.804
	지역 생활여건 인식	자연환경, 여가·문화, 주거비용, 의료·편의시설, 자녀 교육·돌봄 여건	5	.789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	경력 활용 일자리 존재, 안정적 소득 확보 가능성, 새로운 직업 탐색의 유리성	3	.914
	지방자치단체 정착지원정책 효과 인식	취업·창업 교육 유용성, 상담·정보 제공 도움, 정착 준비 지원 효과, 지원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	4	.918
	가족의 지지	가족의 전반적 지지, 생활환경에 대한 긍정적 평가, 경제활동·관계 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 가족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	4	.869
통제 변수	연령	연령대	1	—
	자녀 유무	자녀 없음=0, 자녀 있음=1	1	—
	강원 근무경험	강원지역 군 근무기간(5개 구간)	1	—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변수는 구성 문항의 평균 값으로 산출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각 척도의 Cronbach's α 는 .715~.918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고, 문항분석에서도 수정된 문항-전체 상관이 .35~.88로 기준(.30)을 충족하였으며 특정 문항 제거 시 신뢰도가 크게 개선되는 경우는 없었다. 한편 척도 간 상관이 가장 높은 지역 생활여건 인식과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r=.612$)의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두 척도의 8개 문항을 대상으로 제한적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 적합성은 양호하였으며($KMO=.854$, Bartlett $\chi^2=261.16$, $p<.001$), 고유값 1 이상의 요인이 2개 추출되어 누적 설명 분산은 67.2%로 나타났다. 취업 가능성 3개 문항은 첫 번째 요인에(적재값 .88~.91), 생활여건 5개 문항은 두 번째 요인에(적재값 .57~.72) 적재되었으며, 일부 생활여건 문항에서 중간 수준의 교차적재가 나타났으나 모든 문항이 이론적으로 설정한 요인에 더 높게 적재되어 두 척도가 구분되는 구성개념임을 보여준다. 다만 표본 규모($N=65$)의 제약으로 전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통제변수는 연령, 자녀 유무 및 강원 근무경험으로 설정하였다. 연령과 강원 근무경험은 각 응답범주에 순서형 값을 부여하였으며, 강원 근무경험은 근무 유무가 아니라 근무기간을 5개

구간으로 측정한 변수이다. 가족 구성은 미혼, 기혼·자녀 없음, 기혼·자녀 있음의 세 범주로 조사하였으나 미혼 응답자가 4명으로 적어 미혼과 기혼·자녀 없음을 통합하고, 자녀 없음을 0, 자녀 있음을 1로 하는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2) 분석방법

회귀분석에 앞서 종속변수의 분포가 높은 값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왜도와 첨도 및 최고점 응답 비율을 확인하고, 잔차의 정규성·등분산성 검토와 영향점 진단 및 분산팽창요인(VIF) 점검을 실시하였다. 대안으로 순서형 로짓모형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였으나, 종속변수가 3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9개 범주로 세분되고 일부 범주의 사례 수가 1~4명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모수 추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표본 규모에 비해 최종모형의 설명변수가 8개로 많아 회귀계수 추정의 안정성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HC3 강건표준오차와 사례 재추출 부트스트랩(5,000회)을 보조적인 강건성 검토로 활용하고 강원 근무경험을 제외한 민감도 모형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이에 회귀분석 결과는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심층인터뷰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정착 의향의 이유, 정착 저해요인 및 필요 지원정책에 관한 복수응답 문항은 회귀분석에 투입하지 않고 정착 관련 인식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65명이며, 일반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응답자는 전원 남성이며 50대(73.8%)와 총 복무기간 20년 이상(95.4%)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군 조직에서 장기간 직무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장기복무 전역예정 군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기혼자가 93.9%(자녀 있는 기혼자 47.7%)이고 강원 근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응답자가 84.6%에 이르러, 정착지역 선택이 가족의 생활조건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으며 이들이 강원에 대한 생활경험과 접점을 형성한 집단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포는 본 연구의 표본이 50대 이상의 장기복무 기혼 남성 중심의 동질적 집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부 변수의 분산을 제한하여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해석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6〉 응답자 특성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65	100.0	총 군 복무기간	5년 ~ 10년 미만	1	1.5
	여성	0	0		10년 ~20년 미만	2	3.1
연령	20대	1	1.5		20년 이상	62	95.4
	30대	2	3.1	가족 구성	미혼	4	6.2
	40대	7	10.8		기혼(자녀 없음)	30	46.2
	50대	48	73.8		기혼(자녀 있음)	31	47.7
	60대 이상	7	10.8	강원 군무경험	5년 미만	6	9.2
거주 형태	군 관사	18	27.7		5년 ~10년 미만	4	6.2
	자가	39	60.0		10년~15년 미만	17	26.2
	전세·월세	8	12.3		15년 ~20년 미만	20	30.8
	기타	0	0		20년 이상	18	27.7
합계		65	100	합계		65	100

2. 주요 변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여기에서는 주요 변수의 분포와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7〉과 같다.

〈표 7〉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구분	변수	평균	SD	Min	Max
종속변수	지역 정착 의향	4.46	0.71	2	5
독립변수	직업전환 준비도	3.83	0.79	2	5
	지역 생활여건 인식	3.35	0.65	2.2	5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	2.85	0.84	1	5
	정착지원정책 효과 인식	4.26	0.68	2.25	5
	가족의 지지	3.88	0.73	2.25	5

주: N=65

지역 정착 의향은 평균 4.46(SD=0.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강원 지역 정착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은 평균 2.85(SD=0.84)로 가장 낮아, 정착하려는 의향은 높지만 자신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

는 일자리를 확보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정착 의향과 취업 여건 인식 간에 뚜렷한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한편 정착 의향의 분포를 추가로 검토한 결과 왜도는 -1.451, 첨도는 1.880으로 높은 값에 응답이 집중된 부적 편포가 확인되었고, 평균값이 최고점인 5.0으로 나타난 응답자는 30명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자에게 천정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주며, 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라는 표본 특성과 함께 회귀계수의 추정 정밀도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정착 의향은 전체 전역예정 군인에게 일반화하기보다 본 조사대상에서 확인된 특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 간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1. 지역 정착 의향	1					
2. 직업전환 준비도	.350**	1				
3. 지역 생활여건 인식	.419***	.318**	1			
4.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	.481***	.190	.612***	1		
5. 정착지원정책 효과 인식	.397**	.214	.290*	.338**	1	
6. 가족의 지지	.501***	.194	.546***	.436***	.477***	1

주: N=65.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수인 지역 정착 의향은 다섯 개 독립변수 모두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상관계수의 크기는 가족의 지지($r=.501$),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r=.481$), 지역 생활여건 인식($r=.419$), 정착지원정책 효과 인식($r=.397$), 직업전환 준비도($r=.3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지지와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이 정착 의향과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독립변수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는데, 특히 지역 생활여건 인식과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 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고($r=.612$) 지역 생활여건 인식과 가족의 지지 간 상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r=.546$). 다만 이러한 수준이 곧바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두 척도는 제한적 요인분석에서 서로 구분되는 요인으로 추출되어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다음 절의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분산팽창요인(VIF)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전역예정 군인의 강원지역 정착 의향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은 주요 변수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다섯 개 요인은 모두 정착 의

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만 상관분석은 두 변수 간의 관계만을 확인한 것이므로, 어떠한 요인이 다른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독립적인 관련성을 유지하는지는 다음 절에서 검토한다.

3. 지역 정착 의향 관련 요인분석

지역 정착 의향과 관련되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최종모형의 가정 충족 여부를 진단한 결과, 표준화 잔차의 정규성(Shapiro-Wilk $W=.971$, $p=.125$)과 등분산성(Breusch-Pagan LM=11.449, $p=.178$)은 기각되지 않았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1.859로 나타났다. Cook's distance의 최댓값은 .347로 1을 초과하는 극단적인 영향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 사례는 완화된 기준($4/N$)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였다. 즉 종속변수의 편포에도 불구하고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은 대체로 충족되었으나, 개별 계수의 해석에는 표본 규모에 따른 주의가 요구된다.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세 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형 1의 설명력은 27.3%($F=7.648$, $p<.001$), 개인·지역·정책 요인을 추가한 모형 2는 45.7%($\Delta R^2=.183$, $p<.01$), 가족의 지지를 추가한 모형 3은 50.7%로 증가하였고 추가 설명력도 유의하였다($\Delta R^2=.050$, $p<.05$). 분산팽창요인은 1.19~2.02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종모형에서는 가족의 지지가 가장 큰 표준화계수를 보이며 지역 정착 의향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beta=.294$, $p<.05$). 개인·지역·정책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가족의 지지가 모형의 설명력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제대군인의 정착지역 선택이 가족 단위의 의사결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강원 근무경험이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유의하여(모형 3 $\beta=.239$, $p<.05$), 장기간의 강원 근무를 통해 축적된 지역의 친숙성, 생활경험 및 사회적 관계가 정착 의향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연령은 모형 1에서는 유의하였으나($\beta=.236$, $p<.05$) 개인·지역·정책 요인이 추가된 이후 회귀계수의 크기가 감소하면서 유의성이 약화되었다(모형 3 $\beta=.176$). 연령이 다른 독립변수와 높은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특정 변수와의 공분산이라기보다 표본에서 여러 관련요인이 함께 투입되면서 연령의 고유한 설명력이 감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 유무 역시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녀의 존재 자체보다 가족이 강원 정착에 동의하고 지지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지역 정착 의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및 민감도 분석 결과

구분	변수	모형 1 B	β	모형 2 B	β	모형 3 B	β	민감도 모형 B	β
통제 변수	상수	2.725***		1.089		0.950		0.934	
	연령	0.243*	0.236	0.189	0.184	0.181	0.176	0.251*	0.245
	자녀 유무	0.271	0.193	0.074	0.052	0.114	0.081	0.226	0.161
	강원 근무경험	0.182*	0.314	0.137*	0.238	0.138*	0.239	—	—
독립 변수	직업전환 준비도			0.106	0.118	0.113	0.125	0.163	0.182
	지역 생활여건 인식			0.129	0.119	0.000	0.000	-0.019	-0.017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			0.222*	0.265	0.200	0.239	0.218*	0.261
	정착지원정책 효과 인식			0.148	0.142	0.034	0.032	0.036	0.034
	가족의 지지					0.285*	0.294	0.283*	0.292
	R ²	0.273		0.457		0.507		0.466	
	수정된 R ²	0.238		0.390		0.436		0.400	
	ΔR^2			.183**		.050*			
	F	7.648***		6.843***		7.185***		7.106***	

주1: N=65. * $p < .05$, ** $p < .01$, *** $p < .001$.

주2: B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는 표준화 회귀계수임.

주3: 자녀 유무는 자녀 없음(미혼과 기혼·자녀 없음 포함)=0, 자녀 있음=1로 코딩함.

주4: 민감도 모형은 통제변수인 강원 근무경험을 제외하고 추정한 모형임.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은 모형 2에서는 유의하였으나($\beta=.265$, $p<.05$) 최종모형에서는 정적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5%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beta=.239$, $p=.058$). 따라서 가설 3은 기각하되, p 값이 유의수준의 경계에 근접하고 정적 방향이 유지되었으며 후술하는 민감도 모형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취업 가능성과 정착 의향의 관계는 충분한 표본을 확보한 후속 연구에서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직업전환 준비도, 지역 생활여건 인식 및 정착지원정책 효과 인식은 상관분석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나 다른 요인을 동시에 투입한 회귀모형에서는 독립적인 설명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요인들이 정착 의향과 무관하다기보다 상호 관련된 변수들과 설명력을 공유하거나, 표본 규모와 정착 의향의 제한된 분산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직업전환 준비도의 경우 준비된 역량을 반드시 강원지역에서 활용하기보다 경력에 부합하는 기회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어, 개인의 취업역량 강화만으로는 특정 지역으로의 정착을 유도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가설 1,

가설 2 및 가설 4는 기각하였다.

한편 소표본에서의 추정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과 강건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강원 근무경험은 근무 유무가 아니라 근무기간을 측정한 변수로 5년 미만(9.2%)부터 20년 이상(27.7%)까지 분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10년 이상 근무자가 84.6%로 상위 구간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변수를 제외한 민감도 모형을 함께 분석하였다. 제외 시 가족의 지지는 유의성을 유지하였으나($\beta=.292$, $p<.05$) 지역 내 취업 가능성($\beta=.261$, $p<.05$)과 연령($\beta=.245$, $p<.05$)이 새롭게 유의하게 나타나, 가족 지지의 관련성은 모형 설정에 관계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취업 가능성과 연령의 유의성은 강원 근무경험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HC3 강건표준오차와 사례 재추출 부트스트랩에서는 가족 지지의 유의성이 일관되게 확인되지 않았다.⁵⁾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는 개별 변수의 확정적 효과라기보다, 정착 의향이 가족의 지지, 지역 근무경험 및 취업 여건과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본 표본에서의 탐색적 관련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연구가설 검증 결과

가설	내용	기본 모형	강건성·민감도 검토	종합 판단
가설 1	직업전환 준비도가 높을수록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 의향은 높을 것이다.	기각	변화 없음	기각
가설 2	지역 생활여건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 의향은 높을 것이다.	기각	변화 없음	기각
가설 3	지역 내 취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 의향은 높을 것이다.	기각	강원 근무경험 제외 시 유의	기각
가설 4	지방자치단체 정착지원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 의향은 높을 것이다.	기각	변화 없음	기각
가설 5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 의향은 높을 것이다.	채택	유의성 비일관	채택

5) 잔차의 등분산성은 확인되었으나 소표본과 일부 높은 레버리지 관측치의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HC3 강건표준오차를 보조적으로 검토하였다. HC3 적용 시 가족의 지지는 $p=.109$, 강원 근무경험은 $p=.049$ 로 나타났으며, 비표준화계수에 대한 사례 재추출 부트스트랩(5,000회, 백분위법) 95% 신뢰구간은 가족의 지지 $[-.045, .580]$, 강원 근무경험 $[-.008, .266]$ 으로 0을 포함하였다. 또한 외적 스튜던트화 잔차가 큰 사례 1건을 제외하면 가족의 지지($p=.107$)와 강원 근무경험($p=.055$)의 유의성이 달라져, 소표본에 따른 추정의 민감성이 확인된다.

종합하면, 상관분석에서는 다섯 개 독립변수가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이들을 동시에 고려한 회귀분석에서는 가족의 지지와 강원 근무경험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설명력을 유지하였다. 이는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 의향이 개인의 직업전환 준비나 특정 지역·정책에 대한 개별적 인식만으로 설명되기보다, 가족의 동의와 장기간의 지역 근무를 통해 축적된 생활경험 및 지역적 접점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탐색적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은 평균이 주요 변수 가운데 가장 낮았음에도(2.85) 회귀분석에서는 경제적 유의성에 머물렀다. 이러한 분석만으로 취업 가능성을 실제 정착의 제약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다음 절의 복수응답 및 심층인터뷰 결과를 통해 보완적으로 검토한다.

4. 정착 관련 인식 및 정책수요

앞선 위계적 회귀분석은 주요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이후 각 변수가 지역 정착 의향과 갖는 독립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지만, 응답자가 실제로 어떠한 이유에서 강원 정착을 고려하고 무엇을 제약요인으로 인식하는지까지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착을 고려하는 이유, 망설이는 이유 및 필요한 지원정책에 관한 복수응답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각 문항은 최대 2개 항목을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표 11)).

정착을 고려하는 이유에서는 가족의 의견이 46.2%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주변 지인 관계, 자연환경, 경제적 이유가 뒤를 이은 반면 일자리는 18.5%에 그쳤다. 이는 정착 의향이 경제적 기회보다 가족의 의견과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가족의 지지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 회귀분석 결과와 부합한다. 그러나 정착 저해요인에서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이 81.5%로 두 번째인 의료·생활 인프라 부족(41.5%)의 약 두 배에 이르렀으며, 배우자 일자리 문제와 자녀 교육·돌봄 문제도 각각 18.5%로 나타나 정착의 제약이 본인의 일자리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과 생활조건으로 확장됨을 보여준다.

필요한 지원정책에서도 일자리 연계 지원이 84.6%로 가장 높았고 생활정착 정보 제공·사후관리와 주거 지원이 뒤를 이어 저해요인의 구조와 상응하였다. 배우자 일자리 지원(12.3%)과 자녀 교육·돌봄 지원(9.2%)에 대한 수요도 확인되어, 정착지원정책이 개인 단위의 취업지원을 넘어 가족 단위 지원을 포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 정착 관련 인식 및 정책수요 결과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항목	빈도(명)	비율(%)
정착 고려 이유	가족 의견	30	46.2	일자리	12	18.5
	주변 동료 및 친구 등 지인	22	33.8	강원특별자치도 정책	9	13.8
	자연환경	21	32.3	귀농·귀촌·귀산	5	7.7
	경제적 이유(집값 등)	18	27.7	기타	4	6.2
정착 망설 이유	적합한 일자리 부족	53	81.5	자녀 교육·돌봄 문제	12	18.5
	의료·생활 인프라 부족	27	41.5	지역 적응 및 주변 지인 부족	9	13.8
	배우자 일자리 문제	12	18.5	주거 불안	4	6.2
필요한 지원 정책	일자리 연계 지원	55	84.6	자녀 교육·돌봄 지원	6	9.2
	생활정착 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	26	40.0	창업 지원	5	7.7
	주거 지원	24	36.9	귀농·귀촌·귀산 지원	3	4.6
	배우자 일자리 지원	8	12.3	기타	2	3.1

주: 복수응답(최대 2개 선택) 결과이며, 비율은 전체 응답자 65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구분별 비율의 합계는 100%를 초과함.

주목할 점은 정착 고려 이유에서는 18.5%에 그쳤던 일자리가 저해요인(81.5%)과 필요한 지원정책(84.6%)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난 역전 패턴이다. 이는 일자리가 정착 의향을 형성하는 주된 유인이라기보다 이미 형성된 의향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기술통계에서 확인된 낮은 취업 가능성 인식(평균 2.85) 및 회귀분석에서 취업 가능성이 경제적 유의성($\beta=.239$, $p=.058$)에 머문 결과, 그리고 민감도 모형에서 취업 가능성이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관된 방향을 보인다. 종합하면 가족과 지역의 관계는 강원 정착을 고려하게 하는 주요 배경인 반면, 적합한 일자리와 생활기반은 정착 의향을 실제 정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인식이 실제 정착 의사결정에서 어떠한 맥락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5. 심층인터뷰 결과

심층인터뷰는 회귀분석 결과가 실제 정착 의사결정에서 어떠한 맥락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발언자의 지위를 구분하기 위해

전역예정 군인은 A~G, 센터 담당 공무원은 담당자 A~B, 상담사는 상담사 A~D로 표기하였고, 인용문은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어체를 정리하였다.

〈표 12〉 심층인터뷰 참여자 구분

집단	표기	인원	주요 특성
전역예정 군인	전역예정 군인 A~G	7명	15~34년 복무, 철원·강릉·춘천 등 강원지역 근무 및 생활 경험
센터 담당 공무원	담당자 A~B	2명	센터 행정·사업 운영 및 자료관리 담당
센터 상담사	상담사 A~D	4명	제대군인 상담, 교육,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담당

1) 가족 단위 의사결정으로서의 정착지역 선택

인터뷰에서는 정착지역 선택이 제대군인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간의 조율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임이 확인되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아내한테 서울로 오라고 하고 있고, 저랑 아들 둘은 가기 싫어합니다. 아내는 반반인 것 같아요. 춘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계속 있고 싶은데, 직장이 애매하니까요.” (참여자 C)

배우자의 직장과의 자녀의 생애단계는 기존 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요 조건이었다. 특히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이주가 제약되었으며(“아이들이 중3, 고2, 고3에 걸리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참여자 E), 학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족과 분리 거주한 후 합류를 계획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저는 원래 여기 정착을 반대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병원을 가려면 의정부까지 나가야 하고, 일자리도 너무 없고요. 그런데 단 하나, 가족 때문에 남는 겁니다.” (참여자 F)

이처럼 가족의 생활기반은 지역 여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정착지역 선택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었다. 이는 가족의 지지가 최종 회귀모형에서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결과와 부합한다.

2) 지역 생활기반과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장기복무 군인에게 근무지역은 단순한 직장 소재지가 아니라 본인과 가족이 주거·교육·소비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생활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철원에서 27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철원이 너무 살기 좋습니다. 아이들 학교나 교육도 크게 나쁘지 않고, 의료가 제일 불편하기는 하지만 도로가 발달해서 괜찮습니다.” (참여자 A)

객관적 제약이 존재하더라도 장기간 생활하면서 관계망이 축적되면 해당 지역을 계속 거주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상담사 역시 장기복무 군인의 관계망이 출신지역보다 근무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군인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고향 친구들과는 이미 오래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가족들도 그곳에서 형성한 지인들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상담사 A)

따라서 강원 근무경험은 근무기간 자체뿐만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생활공간, 가족의 생활권 및 사회적 관계가 축적된 정도를 반영하며, 모든 회귀모형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결과와 상응한다. 이는 장기간의 거주·생활 경험이 장소애착과 지역 특정적 자본을 형성하여 정착 의향의 토대가 된다는 제Ⅱ장의 논의와도 부합한다.

3) 적합한 일자리와 생활여건의 제약

인터뷰에서 나타난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의 수가 부족하다는 의미보다, 군 경력과 전문성에 부합하면서 적절한 소득과 고용안정성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일자리만 구할 수 있다면 그냥 계속 있을 생각입니다.” (참여자 G)

일부 참여자는 정보통신, 전기, 안전관리 등의 경력과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강원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였으며, 유사한 업무에서도 지역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이가 이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같은 일을 해도 보수가 다르다며 서울이나 경기도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여자 C). 일자리

대한 기대 수준은 제대군인의 경제적 여건과 가족의 생애단계에 따라서도 달라져, 자녀교육비 등 부양 부담이 큰 경우에는 보다 안정적인 소득과 고용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생활여건에서는 의료 접근성, 교통, 주거비용이 주요 제약으로 제시되었다. 접경지역에서는 전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 부담이, 영동지역에서는 주택가격 부담이 언급된 반면 원주·춘천과 같은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강원 내부에서도 정착조건이 상이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취업 가능성 인식이 가장 낮고 복수응답에서 적합한 일자리 부족이 가장 많이 선택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전직을 준비하더라도 그 역량을 활용할 기회가 해당 지역에 없다면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직업전환 준비도가 정착 의향을 독립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결과와도 연결된다.

4) 정착지원정책의 역할과 구조적 한계

정착지원정책 효과 인식은 높게 나타났으나 회귀분석에서는 독립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인터뷰 결과, 현행 정책은 정착 의향을 새롭게 형성하기보다 이미 정착을 고려하는 제대군인이 실제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기회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에 가까웠다.

“센터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정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에 정착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센터가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이죠. 설문을 받아보면 대부분 가족의 의견이나 지인 때문에 정착합니다.” (상담사 A)

실제로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이동을 고려하던 전역예정 군인이 센터의 지원으로 취업하여 지역에 거주하게 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센터의 강점은 제대군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상담, 취업·교육정보 제공 및 교육 이후의 지속적인 지원에 있었다. 그러나 지역 일자리의 직접 발굴과 장기적인 정착성과 관리에는 조직·예산상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예산 자체가 너무 작고 위탁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자리 관련 업무도 이미 나와 있는 채용 정보를 보고 하는 수준입니다. 제대군인이 원하는 기업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은 지금 조직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많습니다.” (담당자 A)

이는 정착지원정책의 실효성이 개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자리 발굴과 정착성과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을 종합하면, 정착지역의 선택은 가족 단위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가족의 지지와 장기간의 강원 근무경험은 정착 의향과 관련된 생활기반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반면 군 경력에 부합하는 일자리와 생활여건의 제약은 정착 의향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으로 인식되었고, 정착지원정책은 양자를 연결하되 일자리 발굴과 성과관리에서는 조직·예산상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회귀분석 및 복수응답 결과와 수렴하며, 양적 분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착 의사결정의 맥락을 보완적으로 보여준다.

V. 결론

본 연구는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을 지역 정착 가능성을 갖춘 인구정책의 전략적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사례로 전역예정 군인 65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제대(예정)군인·담당 공무원·상담사 13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활용하여 지역 정착 의향과 관련요인을 개인·지역·정책·가족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착 의향은 평균 4.46으로 매우 높았으나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은 2.85로 가장 낮아 정착 의향과 이를 뒷받침할 여건에 대한 인식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다섯 개 독립변수는 모두 정착 의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기본 위계적 회귀모형에서는 가족의 지지가 가장 큰 표준화계수($\beta=.294$)를 보이고 다른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설명력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Delta R^2=.050$) 통제변수인 강원 근무경험도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유의하였다. 다만 소표본에서의 강건성 검토에서는 가족 지지의 유의성이 일관되게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회귀계수는 확정적 효과가 아니라 본 표본에서 나타난 탐색적 관련성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복수응답에서는 가족의 의견이 정착 고려 이유로, 적합한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나타났고, 심층인터뷰에서도 정착지역 선택은 배우자의 직장과 자녀의 학업이 함께 고려되는 가족 단위의 조율 과정이었으며 제대군인이 요구하는 일자리는 군 경력과 기대소득에 부합하는 일자리에 가까웠다. 현행 정착지원정책은 정착 의향을 새롭게 형성하기보다 이미 정착을 고려하는 제대군인이 그 의향을 실제 정착으로 연결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과 관련된 요인은 정착 의향의 형성에 기여하는 기반과 이미 형성된 의향이 실제 정착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구분하여 이해

할 수 있다. 가족의 지지와 장기간의 지역 근무경험이 형성 기반이라면, 적합한 일자리·생활 여건 및 정책지원은 실현 가능성과 관련된 조건이다. 이는 사전에 설정한 분석틀이 아니라 양적·질적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탐색적으로 도출된 해석으로, 높은 정착 의향과 낮은 취업 가능성 인식이 동시에 나타난 결과는 의향의 형성뿐 아니라 이를 실제 정착으로 연결할 조건의 확보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대군인 지원을 보훈과 개인 단위의 전직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소기반적 인구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제대군인을 지역과 관계를 형성하고 경제활동 가능성을 가진 잠재적 정착인구로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전역 이후의 취업성과를 주로 다룬 기존 연구와 달리 전역 이전 단계의 사전적 정착 의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대상을 조기에 발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가족의 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다른 요인과의 상대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정착지역 선택이 가족 단위의 의사결정이라는 논의를 경험적으로 보완하였다.

정책적으로는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와 정착지원센터가 지역 기업 및 고용·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군 경력과 지역 산업수요를 연결하는 일자리 연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합한 일자리 부족이 주요한 정착 제약으로 인식된 만큼, 지원정책은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넘어 군에서 축적한 조직관리, 안전관리, 정보통신 등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를 발굴·매칭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센터가 시·군 및 교육·주거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배우자의 경제활동, 자녀의 교육과 돌봄, 주거·의료 등 가족 전체의 생활기반을 정착상담 과정에서 함께 고려함으로써, 정착지원의 단위를 개인에서 가족의 생활조건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강원 근무경험이 정착 의향과 일관되게 관련된 결과는 전역 이전 단계에서 도내 장기 근무자를 조기에 발굴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방부의 전직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착지원을 연계하여 전역 이전부터 희망지역, 군 경력 및 가족생활 조건을 파악한다면 지원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업성과도 취업률에 한정하지 않고 도내 취업 여부와 일정 기간 이후의 정착 유지 여부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제의 실행을 위해서는 센터의 기능 보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센터는 2개 팀 6명의 인력과 연간 약 3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어 교육·상담 중심의 현행 사업을 넘어 일자리 발굴·매칭과 정착성과 관리로 기능을 확장하기에는 여력이 제한적이므로, 전담인력과 예산의 단계적 보강과 함께 도 차원의 정책기획·기관연계 기능과 센터의 상담·사업수행 기능 간 역할 정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 정착에 관심이 높은 집단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표본이 50대 이상의 장기복무 기혼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고 규

모도 제한적이어서 개별 회귀계수의 유의성이 분석방법에 따라 민감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단기복무 전역자, 여성 군인 등 다른 유형의 제대군인이나 다른 지역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역 이전 시점의 정착 의향을 분석하였으므로 이를 실제 정착성과와 동일하게 해석하기보다 향후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전적 지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전역 이후의 실제 거주지와 취업상태를 추적하여 정착 의향이 실제 정착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가족 구성원의 인식을 함께 조사하거나 다른 군 밀집지역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전역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넘어, 지역과 이미 관계를 형성한 인적자원을 지역의 주민과 경제활동 주체로 연결하는 인구정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착 의향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전직 준비뿐 아니라 가족의 동의, 지역에서 축적된 생활기반, 적합한 일자리 및 정주여건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때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지속 가능한 장소기반 인구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2026).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소개」.
- 관계부처 합동. (2023).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국가데이터처. (2026).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 국방부. (2025). 「전역간부 안내서」.
- 김민혁·김수환. (2024).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삶의 질 실태 분석연구: 육군 전역간부를 대상으로.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50(2): 76-92.
- 김상일·임재욱·권혜정. (2015).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변수가 취업성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5(4): 89-114.
- 김점석·박효선. (2016). 중·장기 제대군인 재취업 취약계층의 전직역량개발 요구분석. 「Crisisonomy」, 12(11): 99-114.
- 남응우. (2015).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 민보경. (2025).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분석과 시사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5-28호.
- 박진경·김도형. (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13.
- 박혜란. (2009).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현안과 개선방향. 「한국보훈논총」, 8(2): 167-201.
- 박효선. (2022).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 관련 정책의 필요성과 확산방안. 「한국보훈논총」, 21(4): 157-184.
- 양안나·정철영. (201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직업전환과정 연구. 「진로교육연구」, 24(2): 1-24.
- 양혜원·유근환. (2023). 제대군인의 복지향상 방안 연구: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4(3): 5659-5670.
- 이현주. (2025).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자료에 기반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 특성. 「한국보훈논총」, 24(2): 103-126.
- 정철영·방재현·임정훈·이영광·이승엽·김동주. (202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4(2): 51-81.
- 최예술. (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국토연구원. WP 22-06.
- 통계청. (2025).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25.07.29.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DaVanzo, J. (1981). Repeat migration, information costs, and location-specific capital. *Population and Environment*, 4(1): 45-73.

- Hidalgo, M. C. & Hernández, B. (2001). Place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ques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273-281.
- Lee, E. S. (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1): 47-57.
- Mincer, J. (1978). Family migration decis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5): 749-773.
- Sjaastad, L. A. (1962). The costs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 Part 2): 80-93.
- van Dalen, H. P. & Henkens, K. (2013). Explaining emigration intentions and behaviour in the Netherlands, 2005-10. *Population Studies*, 67(2): 225-241.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783호, 2026. 4. 17.)
- 「군인사법」(법률 제21319호, 2026. 2. 3.)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21738호, 2026. 6. 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5호, 2024. 1. 12.)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armyjob.kr/gwarmy>)(검색일: 2026.4.8.)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s://www.mpva.go.kr>)(검색일: 2026.4.8.)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vnet.go.kr/VnetIndex.do>)(검색일: 2026.4.8.)
-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검색일: 2026.4.8.)

정 기 용: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게임규제정책 수용성 제고에 관한 연구:빅데이터 및 퍼지인지 맵(FCM)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중심으로, 2021)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지방규제, 지방자치, 청년정책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게임규제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설계(2022)”, “청년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정책영역별 이질성과 동질성에 관한 연구(2022)”, “정책행위자에 대한 인식이 규제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2020)” 등이 있다(kyjung415@krila.re.kr).

주 희 진: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통합적 정책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의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2015)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지방행정, 지방의회, 정책평가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사무조사 자동화 기초연구(2024)”, “지방의회 주민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2023)”,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지방행정 통계지표의 현황분석과 새로운 지표 제안(2023)” 등이 있고, 저서로는 「행정학개론」(대영문화사, 2023), 「지방행정, 새로운 접근」(윤성사, 2023) 등이 있다(iamheejin@krila.re.kr).